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최상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구형회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na's arms buildup in
security of Korea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최 상 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na's arms buildup in
security of Korea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최상원

최상원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최 상 원

본 논문은 G2국가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군사력 변천과정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중국은 2012년 11월 8일 제 18차 당 대회를 열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총서기로서 추대되었다.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중국지도자가 바뀌는 지금 시점은 한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같은 해 11월 6일은 미국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였고 한국 대통령도 12월에 교체가 되는 현재 시점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와 한국안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제 4야전군 등 수십여 개의 사·여단 병력 1,000,000만 여명을 북한에 지원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 이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군사·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은 과거 인해전술과 더불어 현대의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된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군사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50여종의 육·해·공군의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비증강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위협인식 필요성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중국 군사력의 변화상향과 중국의 군비 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됨으로서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 증강은 「중국 국방백서 2010」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비공개된 군사력과 군비증강 실체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 할 것이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의 실력과 실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중국군의 모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방예산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5차 회의에서 2011년보다 11.2% 늘어난 6,702억 7,400만 위안(약 118조 9,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군비와 발전하는 군사력은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인 대응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중국의 위협인식, 군비 증강, 군사력 증강, 중국 국방백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중국의 군비증강 실태와 한반도 안보	4
제 1 절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4
1. 중국 군사력 증강의 원인과 배경	4
2. 군 현대화 및 국방체계의 전반	8
제 2 절 중국의 군비증강 실태	13
1.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13
2. 주변국들과의 분쟁 증가	15
제 3 장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8
제 1 절 중국의 위협형태와 위협인식의 필요성	18
1. 위협의 형태	18
2. 위협인식의 필요성	22
제 2 절 군비경쟁 가속화와 안보위협 증대	24
제 3 절 주변국과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9
1.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9
2.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32
3.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33
4.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34

제 4 장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36
-----------------------------	----

제 1 절 경제적 대응	36
제 2 절 정치·군사적 대응	39
제 3 절 한미동맹 유지	44
제 4 절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구축	49

제 5 장 결론	53
-------------------	----

【참고문헌】	55
--------------	----

ABSTRACT	58
----------------	----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2-1] 중국 군사전략방침 변화 전망	5
[표 2-2] 안보리 대북 결의안 비교	9
[표 2-3] 극동지역 군사력	10
[표 2-4] 전력증강 개념	12
[표 2-5] 핵심 전력	12



【 그림 목 차 】

<그림 2-1> 중국-대만 군사력 비교	11
<그림 2-2>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	16
<그림 4-1> 중국-러시아 서해 연합 해군 훈련	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및 군비 증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국가 행사에서 보여주는 최신 첨단 무기들과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들을 접하면서 우리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을 보면서 우리와의 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암묵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은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조기경보기(KJ-200), 이지스함(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인 J-10의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군사·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군비경쟁을 촉진하여 새로운 양상의 미래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6.25 전쟁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동북아에서 남사군도·이어도·센카쿠 열도 등의 영유권 분쟁에 군사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양상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각 군의 전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여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 국방백서 201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 3장에서는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건설과정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각종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군의 군사력 운용을 다루었으며, 8장에서는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해 기술하였다.²⁾ 이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매우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을 의식한 탓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1) 신화통신 뉴시스, 2010년 1월 16일자, “중국 7년 새 3배 군비증액 등 군비증강 도미노”

2) 국방정보본부(2011), 『중국 국방백서』, 중국 : 중앙군사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방백서에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과 군비증강은 세계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비증강은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과 위협인식의 필요성과 군비증강 실태가 미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과 위협인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과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발표한 최신자료와 국방백서에 기재된 내용,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한미동맹 지속 유지,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개관하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군비증강 실태와 한반도 안보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도출한 다음, 제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 국방백서와 최신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중국군의 연구자료, 학술자료와 중국연구 학자들의 연구논문 및 관계문헌, 신문자료를 종합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각종 자료에 대한 해석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틀은 중국의 군비증강실태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과 분석의 토대를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국의 군비증강을 각종 논문과 자료 등의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중국 군비증강의 최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한국안보에 대한 위협, 대응방안을 분석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국 관련 최신자료의 공개된 내용이 적어 자료수집이 제한되고 중국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중국의 실질적인 군비증강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제 2 장 중국의 군비증강 실태와 한반도 안보

제 1 절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1. 중국 군사력 증강의 원인과 배경

1)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중국의 군 현대화 정책은 1949년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모택동 시대에는 자주·자립에 바탕을 둔 자력갱생 노선을 정책 지표로 삼아 낙후된 중국의 공업 능력을 감안해 전군을 재래식 무기로 현대화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였고, 이후 등소평 또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력이 축적됨에 따라 군의 현대화는 계속 추진되어 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하루아침에 부각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료되고 다자외교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중국 군사력 증강의 방향도 변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다.

동북아지역은 정치·경제·외교·군사안보 등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20%이상이 이 지역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세계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4대 강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에 남아있는 두 개의 분단국이 모두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동북아는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다.³⁾

21C에 들어와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은 복잡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자적 역할을 자처하면서 개입과 확장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했던 것과 달리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오바마

3) 공성진·최종철(2008), 『대한민국 안보전략 : 2009~2013』, 서울 : 시대정신, p.132.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국으로 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주의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군사력의 증진과 동시에 경제력 강화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은 군사전략방침을 변화하고 있는데 [표 2-1]과 같이 단기적인 관점의 위협대비보다는 동북아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미국과의 전략적 대비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1] 중국 군사전략방침 변화 전망

1993년 신시기 군사전략방침	정보화전쟁 군사전략방침 (추정)
적이 타격한 후에만 타격(後發制人)	상대적으로 선제타격 가능성 강조
국부작전과 전체안정의 관계를 고려	전쟁의 국부화 강조
지연작전과 신속결전 동시 준비	신속결전 강조
첨단기술로 제압하는 것(以高制高)과 저 기술로 제압하는 것(以低制高) 구분	정보기술로 제압 및 장거리 타격 강조
장거리 타격과 근접전투를 병행	단, 정보화 이전 비대칭전략 추구

출처 : 박창희(2011 : 118)

4) 강대한 군사력에 의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중국이 비난하면서 나온 용어. 본래 패권이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비난한 1968년 8월 신화사 보도에서였다. 그 후 1972년 2월 미국·중국 공동성명에서 사용되었는데, 영문표기 헤게모니(hegemony)를 중국신문은 패권주의로 표기하였고, 그해 9월 중국·일본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일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여하한 국가의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2) 걸프전의 영향

걸프전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강한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 공격기, MLRS, 패트리엇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등 하이테크 무기를 보며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준 첨단무기의 위력에 영향을 받아 미래전의 성패는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과 운용에 있다고 판단하고 ‘고도의 기술적 조건하의 국지적 제한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지적 위기 상황에 신속,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 군 체제를 구비하고, 첨단 무기 체제의 도입 등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중국군의 군사적 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걸프전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의 위력을 본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은 곧 중국 군사력 체계의 변화를 야기 시켰다. 과거 마오쩌둥의 교시를 받들어 게릴라전을 통해 전쟁을 이기는 전략을 생각하던 중국은 베트남과의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걸프전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전쟁이 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과학 병기에 밀려서 패배한다며 군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으로, 불과20년 사이 현재에 이르러선 중국군의 질적 팽창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중이다. 조기경보기와 항공모함 준비가 그 예이다. 더불어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역량을 본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더욱 긴장하고 미국과의 군사교류관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중국의 군사적 외교 공세는 현재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고 있는 아시아의 안보 체제를 대체할 지역 동맹 체제에 대한 제안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군사적인 관심의 변화

중국은 2006 국방백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고 보면서 일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달성했으며 평등·다원·개방·호혜를 바탕으로 한 부분적 협력 국면이 현재 형성되고 있고

다자간 안보 대화와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비록 국방백서에서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아시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RMA 전략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 조건에서의 전쟁능력 강화방침은 “국지전” 사상의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대 대만작전”의 범위를 초월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2004년 국방백서에는 대만독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졌지만 2006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력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북아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 평화헌법수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방안 모색, 군사 외항화 추세에 대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비록 국방백서에는 동북아 및 세계정세를 안정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동북아 정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아시아 및 세계정세에 대한 안정적인 인식의 저변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발로임을 인식해야 한다.⁵⁾

전통적으로 중국 방위 전략과 군사계획의 우선순위는 대규모의 병력이 광범위한 국내외 지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략 미사일 및 해군이나 공군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적인 상황은 「첨단 상황 하에서의 국지전쟁」이라 부르는 편이 적합하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다양한 현대전의 개념을 도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술의 개발을 우선시 해왔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사실 모택동의 전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첨단전쟁, 중국 연안 지역의 경제거점 보호, 가능성 있는 위협의 개념 등이 현재 중국 군사 전략에 첨가되었고, 군사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다.

차세대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 역시 미래 첨단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대외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패권주의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 줄 것이 분명하다.

5) 이웅희(2007), “중국의 위협에 따른 군사대응 및 교리발전 방안”,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pp.2-3.

2. 군 현대화 및 국방체계의 전반

1) 군 현대화

먼저 군사 전략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책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적극 방어 전략으로서 90년대 동남아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인 가치,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및 서사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조어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 지역을 전략적인 전방 개념에 포함시켜 방어를 하는 적극 방어 전략이다. 두 번째는 전쟁 억제 전략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 다극적 국제체계가 형성될 때까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속대응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군사력 구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가 시도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과 현대화를 조명함으로써 미래전쟁에서 가능한 작전임무를 추론할 수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재와 미래 대외 용병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⁶⁾

마지막으로 핵전략은 핵확산 금지조약⁷⁾에 관한 국제체제에 협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른 핵보유국차를 줄이려는 전략이다.

특히 핵확산금지 관련해서 과거 대북 안보리 결의안⁸⁾을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볼 수가 있다.

6) 조석현(2011),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2-23.

7)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약칭한다. 1966년 후반부터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하여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간에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보유국들은 그 내용을 비판하였다. 비핵보유국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점,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 비핵보유국의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 25년으로 정한 기한이 너무 길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미·소 양국은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여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 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은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2-2] 안보리 대북 결의안 비교

구 분	미 · 일 안	중 · 러 안	채 택 안
참여국가	미 · 일 · 영 · 프 등 8개국	.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
유엔헌장 7장	원 용	원용안함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 지 하 기 위 한 특별한 책임아래 행동
북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재확인	결정(Decide)	촉구(Callon)	요구(Demand)
미사일 및 관련물질 대북 수출 금지	결정(Decide)	촉구(Callon)	요구(Demand)
북한산 미사일 구입 금지 및 미사일 기술이전 금지	결정(Decide)	촉구(Callon)	요구(Demand)
북핵관련 언급	모든 핵관련 활동중단 6자회담 복귀 추진	NTP,IAEA 안전조치 복귀 촉구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및 NTP · IAEA 협력 강력촉구
결의안의 성격	유엔 회원국에 강제 의무 부과	강제성 없는 권고	제한적 강제성 부과

출처 : 정복현(2010 : 17)

지상군 중심의 군현대화란 병력 감축을 통한 기동성 증진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병력 감축 단계를 거치고 기동부대가 창설되고, 마지막으로 정보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 해군의 경우는 잠수함 및 자체생산 전함의 도입을 통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신형 전투기 도입으로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미사일 방위의 개발, 저 탐지 기술 개발, 레이저 무기 배치 능력 등을 통해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0여 년 전의 군사력인데도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극동지역 군사력

구 분		병 력(천명)				장 비			
		계	육군	해군	공군	전략/미사일 (대)	전차 (대)	항공기 (대)	함정 (척)
북 한		1,170	1,000	60	110	-	3,700	1,720	850
극동 지역	중 국	2,270	1,600	250	420	100	9,200	3,956	2,260
	러시아 (극동지역)	200 (전략 2.2만)	80	50	48	-	3,900	423	115
	일 본	238.2	148.2	44.4	45.6	-	1,040	482	148
	대 만	370	240	62	68	-	1,831	610	145

출처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지역과, 전투정보과(2003)

3) 중국의 국방체계의 전반

최근 중국 군사력에 관해서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증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로 중국 국방백서에서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군사력에 대한 통계 자료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중국 측이 발표한 군사비 보다 2~8배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체계는 크게 지상군(육군에 해당), 해군, 공군, 그리고 제2포병으로 분류된다. 지상군의 구성은 대군구, 성군구, 집단군 체계로 구성되어 전체 병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상군의 임무는 러시아, 베트남 등 11개 국경선에 접한 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지전 발생 후 수시간~3일 이내로 작전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신속 대응 부대를 3개 사단 규모로 지정하고, 작전지역에 3~7월 이내로 투입하기 위해 긴급전개 부대 5개 집단군을 지정하여 부대 구조와 장비를 보강한다. 해군은

3개 함대사령부(북, 동, 남해), 해군 항공 사령부, 잠수함 기지 사령부, 5개 학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은 7대 군구 공군 예하에 12기지와 50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의 공군 중점 강화지시 이후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제 2포병은 적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핵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전술미사일 부대와 전략 미사일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군사력 규모에 비하여 아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실질적인 군사력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림 2-1>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표 2-4]와 [표 2-5]는 중국의 전력증강 개념과 핵심전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그림 2-1> 중국-대만 군사력 비교



출처 : 중국 군사력 보고서(2006 : 미 국방부)

[표 2-4] 전력증강 개념

육군	• 정예화된 신속기동군 체제 구축을 위해 질적 구조로 전환 • 신형전차 도입, 공격헬기사단 창설, 신속대응 긴급전개부대 창설
해군	• 원양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확보에 주력
공군	• 원거리 작전능력 제고를 위한 최신헌 전투기 도입,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생산, 조기경보기 및 공중급유기 확보에 중점
전략무기	• 미,일 견제 가능한 전략무기 증강 • 핵 탄두 경량화 및 위력증대, 미사일 사거리·유도통제능력 향상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1999 : 런던국제문제연구소)

[표 2-5] 핵심 전력

전력명	주요성능	아 유사무기
동풍(DF)-31	• 탄도미사일 • 정확도 : 2~3km • 탄두중량:250kt 급(1,500lbs) 단일 핵탄두 • 추진체 : 3단 고체연료 • 발사중량 : 20톤 • 탄 두 : 700kg • 사 거 리 : 8,000km	• 없음
동풍(DF)-41	• 성능 미정 • -'00~'05 전력화 예정 • -사거리 : 10,000km	• 없음
경항공모함	• 톤 수 : 11,400톤 • 속 력 : 26KTS • 무 장 : SAM, 해리어기:9대, 대잠기:6대 • *중국은 4~5만톤급 건조추진 • 길이/폭 : 182/30.8m	• 없음
핵잠수함	• 톤 수 : 6,500톤 • 속 력 : 22KTS • 무 장 : SLBM(12×JL-1)어뢰발사관 × 6 • 길이/폭 : 120m/18m	• 없음
SU-31MK	• 최대속도 : M2.4 • 실용 상승고도 : 62,600피트 • 전투행동 반경 : 620마일 • *미국의 F-15에 필적할 전투기	• F-X(40대/'04~'07)
F-10전투기	• 최대속도 : M 2.0 • 실용 상승고도 : 50,000피트 • 전투행동반경 : 556km	• F-X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1999 : 런던국제문제연구소)

중국은 현재 공군력과 해군력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전력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현재 군사력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대규모의 군사들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 2 절 중국의 군비증강 실태

1.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중국의 군비확장 실태를 보면 한국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수뇌부 군사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항공모함(航空母艦)⁹⁾ 보유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미사일을 포함한 공군력 강화론도 지배적이다.

미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의 해양작전을 전제한 군비확장 정책이 미국을 위시한 지구촌 여러 나라의 경계심을 자극할 것은 분명하며 중국의 군비확장 규모는 대만작전에 필요한 물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군비확장이 비단 대만 때문이라는 후(胡) 정권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해협력기구(上海協力機構)를 구성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군사연습(軍事演習)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파키스탄(Pakistan)과 미얀마(Myanmar)의 항만(港灣)은 중국의 군사작전의 교두보(橋頭堡)가 되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인다.

또 중국에서는 중동(中東)과 아프리카에서의 원유(原油)를 손쉽게 가져오는 수송수단을 계획 중인데, 이것도 정치적으로나 안전보장 면으로나, 미국과의 길항(拮抗)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자원 확보(資源確保)를 위해, 큰 규모의 원조외교(援助外交)를 시작했다. 그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지만, 가끔 일어나는 분쟁 해결에 대응하는 외교자세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킨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작년 1월에는 미사일에 의한 위성과괴실험(衛星破壞實驗)을 함으로써 국제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香港) 기항(寄港)을 세 차례나 거부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듯한 인상도 준다. 2004년 11월에는 중국 원자력잠수함(原子力潛水艦)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협력위주라야 할 국제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다.

9) 50~100기의 고정날개[固定翼] 비행기를 탑재하여 발착시키고, 탑재 비행기에 대한 정비·보급과 항공관제·통신시설 등의 기지시설을 완비하여, 수상 이동항공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군함이다.

핵보유국(核保有國) 중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나 GNP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집권 초기의 우리와 비슷하다. 중국 공산당(中國共產黨)은 그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지나간 어느 약육강식(弱肉強食) 제국주의(帝國主義)시절의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지, 군비확장에만 중심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방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 항공모함 건조에 나선 중국의 국방비는 수년 내 인접 12개국 국방비 총액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홍콩 (SCMP)는 2015년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12개 인접국의 총 국방비를 추월할 것이라는 국방 컨설팅 기관인 IHS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비지출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첸나이 중국연구센터의 D.S.라잔 소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아시아 국가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이 국방예산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도 군비증강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최근 6년 동안 매년 11% 넘게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이 6011억위안(약 102조6000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실질국방비가 발표치보다 2~3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HS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2015년경에는 2382억달러(약 269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국방비 지출이 인접 12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인접국 전체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S-400 시스템과 수호이 35 전투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중이라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26일 러시아의 '가제트'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말 상당수의 수호이 35기 구입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S-400 미사일 시스템 구입 의사를 밝혔다.

2. 주변국들과의 분쟁 증가

중국은 인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등 많은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당 지역에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장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전략 요충지인 인도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도 관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에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인도는)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도에서 중국이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스¹⁰⁾는 지난 9일 중국군이 1986년 말부터 아루나찰프라데시주 타왕에서 북동쪽으로 68km 떨어진 지역의 28km²가량 땅을 26년째 불법점령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또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인도 국경 인근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J-10, J-11과 같은 3세대 전투기를 티베트 고원지대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지난 2년간 군사훈련과 잠수함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다음 그림은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0) 인도의 델리에서 발행되는 영자 일간신문이다. 진실성·객관성·공정성을 기본 방침으로 최고의 품격과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본사는 델리에 있으며, 뮌하우·파트나·콜카타 등지에서는 지방판을 발행하고 있다. 깊이 있는 특종 기사와 더불어 정치·사회·경제·오락·패션·생활 등 다양한 뉴스로 신뢰감을 유지하며 여론을 이끌어간다. 특히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집필하는 진지하고 솔직한 칼럼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2-2]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



출처 : CIA, 파이낸셜타임스(2010)

중국은 일본과 조어도 영유권 문제로도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두 국가 모두 고문헌을 증거로 들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국이 조어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영토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어도는 1895년 이전 국제법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분명하게 예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서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영유권 소유에 대한 중국과 일본 양국의 국제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곳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막대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 일간의 자원쟁탈전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중, 일간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어도 분쟁 양상은 점점 첨예화되어가고 있다.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이 주요한 분쟁 당사국이다. 중국·대만·베트남은 남사군도 모든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분쟁 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은 섬이 아니며, 만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 하지만 남사군도에서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섬이 아닌 암초와 같은 지형물까지 점령하고, 여기에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사군도의 분쟁 당사국들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인데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고문헌 내용을 살펴보면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

11) 박춘호·유병화(1986), 『해양법』, 서울 : 민음사, p.208.

제 3 장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중국의 위협형태와 위협인식의 필요성

1. 위협의 형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특히 한국안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는 물리적 위협, 정치적 위협, 경제적 위협, 정신 심리적 위협,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1) 물리적 위협

우선 물리적 위협이란 무력 침략 위협과 국내 치안의 문란으로 인한 위협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게 무력 침략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력 침략 위협의 종류는 대규모 무력 공격개시, 군비 강화, 신무기의 개발 배치, 군사전략 전술의 변화, 군사력의 집중 및 이동, 동맹 관계의 변화, 국지적 군사 충돌의 야기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게 물리적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내용 안에 군비 강화와 신무기의 개발 그리고 군사전략의 전술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나 도발적인 충돌 사건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로 군사적으로 부딪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이어도 영토분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협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적 위협

정치적인 위협은 통치기능의 대내적 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리고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생기는 위협이다. 또한 통치기능의 대외적 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정치적 위협이 증대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실제로 한국에게 별다른 정치적 위협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한국이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중국을 대표하고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되어 연임하는 지금 시점은 양국 간의 군사적인 대립구도를 볼 때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3) 경제적 위협

경제적 위협이라는 것은 곧 경제 불안과 연결된다. 경제 불안의 국내적 요인은 국내 경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량의 부족, 과잉 생산이라든지, 유통질서의 문란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외적 요인은 국제 수지의 악화나 경제 협력관계의 균열, 그리고 대외 경제적 압력 등이다.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양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 많다.

1984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인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이어도의 영토분쟁이나 북한과의 국지적인 무력도발 등의 상황이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전개될 시 중국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한국이 중국에게 무역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기사이다.

“한중 수교 첫째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206억 달러를 기록해 35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또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¹²⁾

이러한 수출이 만일 중단된다면 한국의 경제상황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4) 정신·심리적 위협

정신 심리적인 위협은 국가 목표, 이데올로기 시대적 사명감, 무관심, 의타 심리와 사대주의 근성, 대외적 주체성 결여 또는 국가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해외 도피 심리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한에게 국가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한에게 정신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팽창은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과도 관련되어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곧 그런 군사력이 북한에게 전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 해 왔고, 실제로 중국이 북한에게 무기를 팔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사실적인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가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안보에 직접적으로 정신·심리적인 위협 요소가 된다.

12) MBN뉴스, 2012년 8월 24일자, [한·중 수교 20년] 경제교류‘비약’ 중국 의존도 심화

5) 새로운 형태의 위협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란 대규모 테러요인 암살, 항공기 테러, 인질 납치 등에 의한 위협을 말한다. 또는 정보 통신망 교란 바이러스 침입이나 해킹도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교란 등의 사이버 위협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CT의 눈부신 발전과 확산으로 사이버안보(cybersecurity)는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전략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가 간 협력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 하여 상호이해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전략서는 아니지만, 작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여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함께 UN에 사이버공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제출하기도 한 첫국은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이버안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주로 첫국의 I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중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엄청난 역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므로 우리도 첫국의 전략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중국과 세계”(網絡空間安全: 中國與世界) 심포지엄은 중국국제 전략학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특히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샤오텐(馬曉天) 중국인민해방군 부참모장 겸 중국국제 전략학회 회장의 발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국의 공식입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¹³⁾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그 내용 안에 군사의 현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군사의 현대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새로운 위협의 형태를 조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목적이 테러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말하는 군사력 증강의 목적은 우선 자신이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자기 자신 즉 중국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고, 동북아

13) 이강규(2012), 『중국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입장과 시사점』,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1.

지역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현재 상황에서 한국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또한 군 현대화를 진행시켰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크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물리적인 위협의 차원에서 한국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정신·심리적인 위협의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한에게 충분히 정신·심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치적 위협을 가한다거나 경제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중국과 한국이 현재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도 중국 군사력 증강이 남한의 질서를 동요 시킬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협력은 발전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위협요소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게 물리적 위협과 정신·심리적 위협 요소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그 중에서 물리적 위협의 경우는 무력 도발 및 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에서의 양국 해군력의 충돌이 긴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정신 심리적 위협의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인식과 북한 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게 큰 위협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중국 군사력 증강이 남한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물리적 위협과 정신 심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협인식의 필요성

강대국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국제질서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중국은 증가된 세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국가와의 분쟁문제를 자신에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안보위협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력 강화, 동북공정의 가속화, 북한의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 한중 해양 분쟁요인의 심화, 동남아 해상교통로 안전에 대한 위협, 미중 간 경쟁 및 갈등 구조의 심화,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 재편 가능성 등이 될 것이다.

2012. 11. 15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총서기가 된 시진핑¹⁴⁾은 공산당의 원로 가문에서 태어난 귀공자 출신으로 과묵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물이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된 것에 우리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인식해야만 한다.¹⁵⁾

중국은 6.25 전쟁에서도, 천안함 사태에서도,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도 항상 일관되게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였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국의 실체를 다시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매년 최신식 첨단 무기로 증강된 중국의 군사력은 꾸준한 군비증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미래 한반도 안보는 물론 주변국가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도 새로운 양상의 테러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의 군비증강과 위협을 인식하고 군사·경제·정치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 1953년생. 산시성(陝西省) 푸핑현(富平縣, 부평현) 출신의 정치가. 1974년 1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중공 제15차 중앙후보위원(中共第十五屆中央候補委員), 16차 중앙위원(十六屆中央委員)에 선임되었고 2007.10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務委員會) 위원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우방궈(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리커창(李克強), 허궈창(賀國強), 저우융캉(周永康) 등과 함께 서열 6위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후진타오를 있는 차세대 지도자의 하나로 부상하여 현재 중앙서기처서기(中央書記處書記), 중공중앙당교교장(中共中央黨校校長)을 맡고 있다.

15) 조석현(2011),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2-53.

제 2 절 군비경쟁 가속화와 안보위협 증대

한국 주변 즉 동아시아 지역이 무서운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 명 다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무력충돌 상황에 대비한 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¹⁶⁾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이 중국 관공선을 제지할 경우 곧바로 해군을 투입하겠다는 경고성 훈련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11월 5~16일 오키나와 주변에서 미국과 함께 도서탈환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 중국이 센카쿠를 점령했을 때를 대비한 탈환훈련인데 대중관계를 고려 취소되었지만 중국이 일본을 자극하면 다시 시행될 것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달에도 괌에서 미국과 함께 도서방위 합동훈련을 한 바 있다. 중국도 추석이던 30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건국기념일) 연휴 기간에 동해와 남해 함대가 긴급 전쟁준비 훈련을 실시했다. 가상 적진인 한 섬을 정밀 폭격하고 구축함들이 함포로 지원 사격을 하는 해·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도 했다.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중·일 양국 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¹⁷⁾

미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중국과 센카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의 분쟁 상대국들까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한 데 이어, 10월 4일 공격형 핵잠수함이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했다. 특히 미군과 필리핀군은 10월 8일부터 열흘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인근의 대중국 전략요충지에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까지 실시했다.¹⁸⁾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이미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와 전체 11척인 항공모함 중 6척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국 언론 차이쑤은 3일 “미국의 핵항모 파견은 중국군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 핵 항모들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략 핵미사일 부대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16) SBS뉴스, 2012. 10. 20일자 : 중·일 잇단 군사훈련...다오위다오 긴장 고조

17) 복음신문, 2012. 10. 26일자 : 군비경쟁 치닫는 동아시아

18) 조선일보, 2012. 10. 5일자 : 미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대규모 상륙훈련

차이선은 “전략 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이 미국의 41개 주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 훈련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9월에도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의 방중 때 시진핑 국가부주석, 량광레 국방부장 등이 직접화법으로 센카쿠 분쟁에 개입, 일본을 편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중국은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끝없이 추락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도광양회를 넘어 유소작위의 초강대국으로 변해가는 중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군비증강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11년 중국의 국방비를 1,422억 달러로 2000년의 225억 달러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국방예산 대국이 된 중국은 재정위기로 군비를 축소해야 하는 미국과의 격차를 갈수록 줄여가며 세계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리관유 싱가포르 창설자는 이미 21세기 초입에 중국관을 예언했다. “세계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은 현상을 타파하려는 중국의 도전이다. 급격히 그리되지 는 않지만 20,30년 후에는 아주 다른 안보시스템지역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주변국들의 ‘중국 위협론’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사태에 맞춰 최초의 항공모함 취역식을 거행하는 등 전 세계에 그 군사력을 과시했다. 역사 조작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영토를 통째로 자신들의 역사로 만드는 동북·서남공정을 통해 중국은 끊임없이 팽창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와 다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쇠락이 가져온 무력감과 상실감, 원전 위기, 동일본대지진 등 혼란의 돌파구로서 민족감정에 기댄 우경화와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사 부정에 그치지 않고 평화헌법 폐기와 무장의 공식화를 획책한다. 국방예산도 2011년 582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45.5% 늘었다. 오늘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력한 차기 총리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촉즉발의 센카쿠 분쟁 가열 역시 일본 극우파의 대표주자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2012년 4월 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중국과의 충돌은 이미 예고됐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5년 일본의 오키나와와 센카쿠 획득은 팽창주의 침략의 산물이다. 일본은 말 같지도 않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보듯, 아직 침략의 역사를 스스로 반성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 채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는 못된 길로 내달리며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첨단 군사기술과 막강한 전력을 갖춘 일본이 줄기차게 평화헌법의 ‘족쇄’를 벗어던지려는 오늘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¹⁹⁾(CSIS)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아시아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2000년대 이후 10년 새 2배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대규모 장비 도입으로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계의 최첨단 초강력 무기가 아시아로 집결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아시아의 국방비 규모가 올해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²⁰⁾ 해상 영토 분쟁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 등 지역이 불안해지면서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군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보다 쉽게, 자주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센카쿠, 남사군도, 이어도 등 영토분쟁 전 지역에 대처할 때 군사력을 위주로 현상타파 공세를 취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증강과 패권주의 확대와 군비경쟁은 특히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이 바뀔에 따라 미국이 대서양의 해군력을 태평양으로 이전하고, 자연히 G2 국가인 양국 사이에 불신과 외교적 갈등이 자주 초래된다.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강대국의 갈등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과 같은 현안에서 공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다툼이 커질수록 동북아 안보의 매듭은 풀기 어렵게 된다.

19)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 전략적인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 탱크이다.

20)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11) :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서쪽과 남쪽 해역을 그들의 내해로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북한 나진·선봉 등 지금껏 통로가 막혀 있던 동해 진출의 교두보까지 획책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가로막혀 섬 아닌 섬나라가 된 한국이 독 안에 든 쥐처럼 가두어진다. 일본이 상처받은 국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 그 희생양으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 강대국 간 태평양 패권 다툼의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국제정세와 같이 혼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무기 판매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개혁 2020’²¹⁾ 추진과 한미동맹 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국가들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핵 보유와 군사력 증강과 헌법 개정은 물론 다량의 플루토늄 보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게는 패권주의적 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 평화와 공영의 인식이 부족한 중국이 자체개발 전투기 및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는 것이나 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려사안이다.

동북아 지역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 있어서도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차치

21)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에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대신 재 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1]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치우는 열악하다. 2012년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 (41%), 군무원 1조 원 (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5.1%) 순이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점하면서 군사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평균 3~4%인 다른 지역에 비해 8%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의 배경에는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보통군사화,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억제한다는 미국의 안보전략 기조 등 3개의 역학 요인이 각각 현실적으로 역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경제력이 중국적으로 투영되는 곳이 군비 분야이며 이것이 주변국에 안보 딜레마를 자극한다. 즉 군비증강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표상이며 군비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역내 분쟁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외교 협력을 통한 조치 없이는 중국의 군비증강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 핵 폐기 협상에 부가해 한반도 외부로부터 증폭돼 오는 안보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는 협력 증진 방안과 견제 강화 방안을 복선적이고 실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내부적 안보상황 변화가 획기적으로 나타날 2015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인한 역내 불안정성과 위협 잠재성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2012~2015)·장기(2015년 이후) 안보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세부적인 군사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 외교 수월성이 뒷받침되도록 국방개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략기획과 작전 능력을 구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역내 경제협력과 상호 의존 관계의 증진에 대비(對比)해 중국의 군비증강을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취급, 논쟁함으로써 역내 정치 지도자는 물론 역내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이 양국이 군비경쟁을 조기에 중지하고 군축 협상에 임하게 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첫 작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주변국과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직접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간접적인 영향이 한국안보에는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중·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1.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서 중·미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간의 협력은 안보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안보적 차원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과 아태지역의 안보와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입장이 부합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으로도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미국시장으로의 진출과 미국 자본 유치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과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서 중국 시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입장이 부합하고 있다.

중·미간의 갈등 또한 안보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안보적 차원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세계질서와 아태지역의 주도권장악을 지속하려 하는 미국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으로도 최근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아시아지역의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중·미간의 안보적 차원의 갈등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신 국방정책원칙」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29일 웹사이트에 이례적으로

공개한 미 국방부 2004년도 중국 군사력에 대한 대 의회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중국이 대북 국경 경비업무를 인민해방군으로 이관한 동기와 목표를 놓고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잠재적 방지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중국군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미간의 안보적 갈등 중 중요한 것으로 대만문제와 TMD문제²²⁾ 등을 들 수 있다.

대만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오래되고 복잡한 갈등요인이다. 중국의 당·정·군 최고지도자들은 2000년 7월 회의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즉각적 해결, 선택 강요, 구체적인 통일의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해 미국 부시 행정부는 대만의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어떠한 무력 사용도 미·중 관계정상화 시기에 미국이 대만 국민에게 행한 공약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미 관계는 안보적 차원의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중·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10여 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이 지속적인 증가를 해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여 협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과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가는 타국에게 협력의 요인과 갈등의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가는 중·미 관계에 협력과 갈등의 요인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요인은 한국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에서는 중·미 관계가 협력관계로 나아갈 경우와 갈등관계로 나아갈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중·미간의 협력관계가 심화될 경우

22) TMD란 유럽, 태평양, 중앙, 남부, 대서양의 5개 전투사령부 책임 구역(Area of Responsibility)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말한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중·미간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경우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은 아태지역의 안보와 세계 평화질서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부합하여 중·미간 안보적 차원의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되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힘의 균형 상태를 만든다면 역설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미간의 협력관계가 심화된다면 한국안보 또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가장 주된 근거는 중·미간의 협력관계가 심화된다면 한국안보의 가장 큰 현실적 위협요소인 북한문제의 안정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북 핵 완전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데 양국 사이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중·미간의 관계개선은 한국안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중·미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될 경우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중·미간의 안보적 차원의 갈등을 심화시킬 경우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된다면 협력의 가능성보다는 갈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질서와 아태지역의 주도권장악을 지속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상충하여 중·미간 안보적 차원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문제와 TMD 문제 등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할수록 그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중·미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된다면 한국안보 또한 불안해질 것이다. 그 주된 근거 역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군사적인 교류는 미비한 반면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군사동맹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의 관계에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한 갈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간 갈등관계의 심화는 남·북간 갈등관계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한국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과거 냉전시기와 같이 남·북간 대결이 미·중간 대결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중·미간의 관계악화는 한국안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한국안보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외적 위협요인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으로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지상군 현대화는 북한 지상군의 현대화와 기술이전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군사력 증강의 핵심인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는 북한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를 도와줄 것이다. 북한군의 무기 체계는 중국군의 무기체계와 상당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현대화된 군사기술이 북한군에 이전된다면 북한군의 공격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존 군사력의 증강 이외에 중국의 미사일 및 핵 전력의 현대화가 북한에 이전될 경우가 우려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현재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써 한국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위성 핵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무기로 북한은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양국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안보에 중대하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이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6차 회담의 주요 안건은 북핵문제였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신 보상과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핵 완전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원칙적으로 핵동결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핵 폐기에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북핵문제는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핵은 이미 동결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 재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은 2004년 6월말 이전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안정적 해결여부가 한국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

중국은 일본과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 문제와 영토분쟁,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세계전략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현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96년 미·일 新방위선언과 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문제, TMD 미·일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면서 일본이 시도하는 방위력 증강 계획과 자위대 활동영역의 확대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인식하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대만문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 극우파가 보통국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관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양국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중·일간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대규모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현 상태에서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힘의 공백상태를 이용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영향력의 확대 범위를 미·일 안보체제 정도로 제한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중·일간 갈등관계가 심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국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일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장기적으로 한국안보와 동북아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오랜 현안 문제이었던 국경문제를

해결했으며,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있어 러시아와는 협력관계에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주요한 첨단 군사기술과 장비의 공급원이고,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미국의 제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군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러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2) 양국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04년 4월 7일 러시아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미사일조기경보시스템 등 국방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정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TMD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시사했다. 또한 2004년 6월 1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전격 가입했다. 이는 그 동안 러시아가 취해온 중국과의 미국견제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앞으로의 중·러 관계는 갈등관계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러간 관계는 현재 한국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지만, 앞으로 중·러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안보와 동북아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제 4 장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 1 절 경제적 대응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면서 군비를 더욱 증강하고 있다. 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중국의 WTO²³⁾ 가입이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됨으로써 중국의 개방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밀어닥칠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01. 11. 10 카타르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통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기업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물론 산업개편 불안도 우려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한편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경제질서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무역질서 속으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세계경제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세계적 새 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충축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시장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질서와 규범 수립에 있어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의 확대와 경쟁의

23) 세계 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1994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WTO의 최고의결 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심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무역, 투자 자유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될 것임과 동시에 대중국 투자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반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같은 WTO회원국으로서 우리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억제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번 마늘분쟁에서 보았듯이 농업부문의 타격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숙제이다. 한편 중국 내 사업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한국 내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전될 우려도 있다.

중국시장에서의 사업은 세계적 선진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기회의 확대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은 이미 세계 시장이고 앞으로는 세계적 기업들 및 일류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기에 우리의 대중국 진출 확대도 마냥 행복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또한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가로 미국 등 주요한 제3국 수출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 하락도 가속화 될 것이다. 보다 염려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계산업과 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계산업과 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은 우리와 보완관계보다 경쟁관계의 측면이 점차 부각될 것이기에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앞으로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여 성장해야 하며, 미국, EU등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FTA(자유무역협정)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맞기는 국가 간의 동맹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앞선 기업들에게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제공하며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역내협력 확대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으로써 한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상거래, 토지사용 등에서 이점을 제공하여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자본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보겠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설비, 기술을 매각하고, 전통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 하여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다. 부품, 중간재, 산업설비 등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서 중국의 거대시장을 공략하고, IT 등 신산업은 세계 톱 수준을 견지하고 중국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서구 및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양산,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현 단계 중국기업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산업협력을 국내산업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 돌파 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업들의 발전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적일수도 있지만 반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했고, 동시에 거대시장 출현은 현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 부실 누적, 기업가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외에는 다른 기회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는 요즘 국내 기업들이 수 년 전부터 중국시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온 관계로 진출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대중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영의 중심을 중국에 포함한 동북아 내지 아시아권으로 이동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테러전쟁 이후 중국 등 아시아권의 부상은 더욱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여 중국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즉, 중국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쟁력에 달려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여하히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다.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향후 현실로 다가올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제 2 절 정치·군사적 대응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과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중국의 경제 개방, 개혁 이후 한국과의 관계 또한 밀접해지고 있다. 최근의 북한 핵 개발,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하여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 발전’과 ‘중국을 통한 대북 억지력 제고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지속적인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안보협력 추진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포기 혹은 연로’라는 양국의 중간에서 안보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단 국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대중국 접근은 단·중기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갈등구조 및 상이한 대한반도 이익을 감안할 때, 양국이 모두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중재자, 혹은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은 논리적·선험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단·중기적으로 한국의 대미·대중정책은 ‘전략적 차등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차등화’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검토되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이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한국과 북한의 위기상황을 안정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하에 유지시키려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법적 해석차 이외에도 대량 탈북상황, 대량살상무기 처리문제, 내전·인질 상황 등 이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국가잠재력, 국제적 위상, 국가이념 및 체제속성, 대외·동맹 관계상 차이, 그리고 역사적 유대감과 적대감의 혼재로 인해 서로 다른 국가이익과 감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한·중 간 외교·안보 논의는 가급적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노력 등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협조를 위해서는 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과 국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 상황의 발생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법적 해석차 이외에도 대량 탈북상황, 대량살상무기 처리문제, 내전·인질 상황 등 이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 외교·안보협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실시하여 중국의 대미 및 대일관계 악화를 고려한 대중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건설적 관여'에 기초한 '우호적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 긴밀화 추세 등 낙관적 조망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 안보의 균형감각 및 현실성 상실의 우려된다. 중국의 대미 및 대일관계가 향후 악화될 경우 한·중 관계가 다시금 경색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평시 신뢰구축,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상대적 위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실제 대외·안보정책 결정구조 및 과정성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은 대중국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양국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 통상적인 업무관계 이외에도 다차원적이고, 비공식적 차원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체제 및 중국인의 특성상 한·중 안보관계는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지도자의 개인적 위상 및 주 인사 간의 인맥의 변화 및 중국·당·군지도부 대외·안보환경인식, 중국군의 전력 증강 및 군사외교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간의 쌍무적 관계에는 통일 후를 대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을 기초로 한 정치·외교·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양국관계의 저변확대를 그리고 정부 및 학계의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한·중 군사교류 및 군사 협의회의 활성화와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협의체 형성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안보협력이 동북아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수평적·균형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적용된 ‘헬싱키 합의서’의 10대 원칙 즉 주권평등 및 존중, 무력사용 및 위협금지, 국경불가침, 영토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기본적 자유 및 인권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 간 협력, 국제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의 원용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국측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로 중국대표단의 복귀를 요청하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1961년 체결된 중·북 동맹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철폐를 요청하고, 한·중 간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시에는 상호불가침 조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선, 중국 지도부와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므로 강택민 등 기존 중국의 지도부와도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호금도, 온가보, 증경홍 등 중국의 지도부와도 교류·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중국이 계속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에 대항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미국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발전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냉전 시기처럼 북·중 관계 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

접촉 시 이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문제,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 및 중국내 탈북자문제 등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해 왔으나, 대중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 시민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타파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개편되고 중국이 해·공군력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우리 군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군을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소수 정예화 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상비 부담이 과중하여 전력증강사업이 제한받아 왔다. 예를 들어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는 전략정보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E-X 사업이나 감시권 영역에서의 전력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그리고 전략적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돼 왔다. 대규모 병력중심의 전력구조는 21세기 전략 환경에 경쟁력이 없다. 이스라엘에 제압당한 아랍국 군대와 1991년 걸프전 당시 양적으로 막강한 이라크군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궤멸된 사례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수 정예화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거리 정밀타격용 무기 장비를 갖추야 한다. 미래의 전장 환경은 원거리 정밀 타격전이며 전략적 중심 마비전이다. 따라서 군사력 건설의 주된 방향을 원거리 정밀 타격용 무기체계를 갖추고 적의 전략적 심장부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중국의 분쟁 도발을 예방하고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성에 근거한 3군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해·공군력의 질적 우위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군사력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제한적 해양 분쟁에서 세력우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도발을 예방, 억제할 수 있는 질적 첨단 장비와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의 전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의 전력과 지원을 활용하면서 분쟁도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4)

한편 중국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데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논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북아 안보정세에 있어서 미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하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중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리해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중국의 역할확대, 북한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북핵 문제, 북한미사일 문제 등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통일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24) 조석현(2011),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52-53.

제 3 절 한미동맹 유지

지난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전진’(Forward)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는 당선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희망성취를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서 오바마 재선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다. 우선 두 번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바마의 재선 성공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게 반길 만한 이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는 새 외교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발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한국 친화적인 입장이 더욱 공고화할 것이 분명하다.

1기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 왔는데,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합치했던 덕분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한미 동맹에 대해 ‘주춧돌 보다 더 중요한 핵심 추’라고 밝혀 온 만큼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안정의 근거지 이자 든든한 밑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서해에서 미국 핵 추진항공모함까지 사상 최초로 투입해 벌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자극받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올해 사상최대규모의 합동해상군사훈련을 서해 바다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림 4-1] 중국-러시아 서해 연합 해군 훈련



출처 : 중국 군사력 보고서(2006 : 미 국방부)

문제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서해에서 미국 핵 추진항공모함까지 사상최초로 투입해 벌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20세기의 미국, 소련의 상호 적대적 타도를 전제로 한 냉전 체제속에 구축된 20세기적인 한미 군사동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21세기인 2006년 적대적 타도가 아닌 상호 경제공동번영의 중국 미국 경제 전략대화, 즉 G2 시대가 열리면서 급성장한 중국이 20세기적인 한미 군사동맹에 근거하고 있는 북한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전략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국제정치적으로 동북아에서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세기의 미국, 소련 의 상호 적대적 타도를 전제로 한 냉전체제 속에 구축된 20세기적인 한미 군사동맹에 근거해 북한을 압박하고 그런 북한을

통해서 중국은 21세기인 2006년 적대적 타도가 아닌 상호 경제공동번영의 중국 미국 경제 전략대화, 즉 G2 시대가 열리면서 급성장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욕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욕심은 동북공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심화에 비교하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국력 부상(浮上)의 첫 결과가 인접 국가에 대한 영토적 위협으로 나타나는 최근 일련의 사태가 자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중국 스스로가 중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 사이에 반(反)중국 연대(連帶)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서 G2 시대에 중국의 세계적인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해로부터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는 바닷길을 장악해 해상 패권을 미국과 겨루기 위해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토분쟁을 촉발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붕괴정책의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면서 나진선봉지역 진출은 물론 원산항진출까지 아니 해주 남포진출까지 넘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2006년 랴오닝성 다렌조선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취역식을 거행 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나진선봉지역과 원산항 장전항을 거쳐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중국 남방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종횡무진 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경쟁은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이어도 앞바다에서도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중국과 EEZ²⁵⁾ 확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의 해양주권(主權)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이

25)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기선(基線·출발선)으로부터 2백 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沿岸國)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놓인 국가 안보적 위험 요인에 눈감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선동해온 세력의 반대 때문에 지지부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2 시대에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끈끈하게 해서 한민족 공동체 구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데 중국은 나진선봉항구에 진출해 중국 동북3성과 중국의 남방지역을 이는 해상교통로를 사실상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이어도에서 한국과 중국이 갈등관계인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더욱더 밀착할 것이고 중국은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한에 개방됐다 폐쇄상태인 북한의 최전방 동해안 해군기지인 장전항 까지 진출하면서 중국북한의 밀착을 통해서 영토분쟁중인 일본과 남한과 G2 시대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겨루고 있는 영토분쟁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이번기회에 중국과 영토분쟁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없는 20세기적인 맥아더 헌법을 무력화 시켜 명실상부한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G2 시대에 번지는 영토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국제정치에서 우리 한국이 그런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한 현실이다.²⁶⁾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성장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마이클 그린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의 지속적인 군 현대화 노력과 ‘베이징 콘센서스’(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가 한미가 추구하는 가치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미동맹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영토, 인구, 역사 및 국가 잠재력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역내 강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는 초고속 경제성장,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10%이상 증액, 외국 첨단무기의 구매, 남사군도 및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으로 인해 향후 ‘중국 변수’가 지역 및 세계안보와

26) 조선일보, 2012년 9월 26일자 : “중국의 영토 야심 지나치면 反中 연대 촉진할 것“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탈 냉전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미관계의 변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외 정책상 ‘핵심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적대세력의 팽창 저지를 탈 냉전기 핵심적 대외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 양국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협력 혹은 갈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상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역분쟁의 발발을 억제하려 할 것이고 사안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신뢰 구축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은 경제부문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안보부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과 한국의 동참을 중용하면서 대중 봉쇄망을 강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탈 냉전기 중미 양국은 상호 전략적 맥락에서 각각 남북한과의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1999년 관계 재정상화를 통해 복원시켰으며, 한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및 경제 영역 등 전부분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미 간 각종이견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변화 강화시키고 있으며, 911직후 추구된 대북 강경책을 제외하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는 비교적 일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정책의 변화는 ‘동맹전이’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배국가의 동맹세력과 도전국가의 동맹 세력간 힘이 엇비슷해질 때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면 지배 국가나 도전국가모두 기존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아울러 상대진영의 동맹국을 ‘유인’하려는 전략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중국이 북중 동맹을 견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접근하려는 것이나, 반대로 미국이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중국의 혈맹인 북한을 유인하려는 것은 향후 미중 상호간 관계 설정에 있어서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와중에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체제수호, 북한 관리 및 평화통일 준비, 경제이익 증진 등을 위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발전에는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절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구축

유럽과 아시아지역을 비교해 볼 때, 유럽은 냉전시대부터 다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반면,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에서도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강대국들의 역내 경쟁으로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안보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추진, 중국과 일본의 역내 헤게모니 경쟁, 영토분쟁(한·일간 독도 분쟁, 중·일간 조어도 분쟁, 러·일간 북방열도분쟁), 대만문제, 일본 자위대의 정규군화 추진 등이다. 또한,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속에서 중국의 부상은 점진적으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예고하고 있다.²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전통적인 권력정치적인 세력균형이나 양자외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 냉전기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 안보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양자 외교를 효율적인 보완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안보를 통하여 역내국가 간 대화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비증강에 의한 정치 군사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27) 김지동(2010),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2.

준다.

둘째, 안보개념이 경제, 환경, 마약 및 테러 등으로 광역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해준다.

셋째, 이 지역에 탈냉전 시대에 적합한 평화질서 수립에 도움이 된다.

경성권력에 대한 신뢰구축은 예방외교로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분규나 분쟁 발생 시 위기관리가 가능해 진다.

넷째, 북한에게 안보를 보장해 주는 대신 북한 군사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미국과 일본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급속히 국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중국을 역내 질서에 연착륙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북아에서의 경성권력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을 이끌어 내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현재 동북아 안보전략 구도로 볼 때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미중관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제가 유지되는 한 다자안보에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지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은 현재 동맹 체제를 주요 기제로 활용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이 이러한 동맹체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지도력 발휘에 자제하면서 단지 동맹체제의 보완적 기제로만 다자안보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자안보 협력은 강대국이 전면에서 추진할 경우 약소국들이 오히려 참여를 기피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의 지도력 발휘 자제가 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조만간 구축되기는 어렵다는 현실과 설사 이것이 제도화되더라도 권력 정치적 속성을 지닌 안보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동맹체제의 근간을 급속히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바라고 있는 러시아 및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미국, 중국, 북한을 포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국가목표로 국가안보라는 정적인 가치와 민족통일이라는 가변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국력 면에서 지역 내 정치, 외교,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중하고도 현명한 대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적인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협력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점진적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협력안보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안보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안보로 나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에 상응하는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경직된 중국에 대한 시각을 지양하고 방위력의 질적 제고와 양적 축소를 통하여 이를 정예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하여 남북한 공동안보관에 입각한 불가침조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다자안보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를 가장 희구하는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군사 억지 중심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안보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한 안보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다자안보형성 분위기가 경제 협력을 통하여 조성될 수 있다. 셋째, 포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인다면 중국과 한국이 다자안보의 기관차 구실을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증진,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 북한은 미사일 및 핵개발 의혹해소 등을 통하여 평화 의지를 확인한다면 주변 4국의 보장 하에 남북한이 평화와 공존공영을 다지는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다자협력 기제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동북아 6자 안보 협력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효율적인 국방태세를 다져나가고 한미동맹을 탈냉전시대 안보상황과 한미 양국의 새로운 전략적 이해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 주는 공동안보관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협력안보를 모색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이 연구는 중국의 군비증강에 따른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G2국가로서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국방과 강군을 건설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시진핑 체제 10년은 중국의 원대한 국가목표 구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이다. 우선 개혁개방 초기에 설정한 두 번째 목표인 소강사회가 2020년에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마지막 목표인, 즉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진입을 알리는 “부강민주문명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점차 군비와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 국방백서 2010」과 많은 발표 자료에서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경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는 경쟁력의 중요성으로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다.

향후 현실로 다가올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둘째, 정치·군사적 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중 외교·안보협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실시하여 중국의 대미 및 대일관계 악화를 고려한 대중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중국의 군 현대화에 대비한 자주국방체제를 “국방개혁2020”에 맞춰 실행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중국 군사력증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한미동맹 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체제수호, 북한 관리 및 평화통일 준비, 경제이익 증진 등을 위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과의 긍정적인 동맹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발전에는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략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또한 한미동맹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자간 협력안보를 통하여 역내국가 간 대화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군비증강에 의한 정치 군사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는 급속히 군사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중국을 역내 질서에 연착륙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최근의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위협과 문제의식 등 도출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군비증강에 따른 한국의 위협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대응방안에 의한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분석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외적인 군비증강과 전략에 중점을 비공개한 군사전략에 보다 더 주안을 두고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성현(2005),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김소중(2007), 『중국을 정복하자』, 서울: 백산서당.
- 김수남(2006),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과 전개』, 서울: 국방대학교
- 김수진(2007) 『국가안보와 경제』, 서울: 국방대학교
- 김영춘(2004),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 공성진·최종철(2008), 『대한민국 안보전략: 2009~2013』, 서울: 시대정신
- 국방정보본부(2011), 『중국 국방백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 성채기 외(2011),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강규(2012), 『중국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입장과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두형(2006), 『중국 군사력』,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 이상현 외(2005),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외교안보』, 성남: 세종연구소
- 이영주(1998),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서울: 나남출판
- 이창형(2001), 『중국의 군』, 서울: 대한
- 이희옥(2007), 『중국의 국가 전략연구』, 서울: 폴리테리아.
- 오규열(2000), 『중국 군사론』, 서울: 지영사.
- 육군사관학교(2004),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11),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 미국.
- 전성홍, 이종화(2008).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 박춘호·유병화(1986), 『해양법』, 서울: 민음사.
-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5),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과 전망』,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논 문]

- 김강현(2011),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후(2008), “한·미 안보 협력체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동(2010),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병문(2011),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논문.
- 박성화(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희(2011), “중국 국방백서를 통해 본 중국의 국방정책”, 한국국방연구원 학술논문.
- 박병철(201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 : 변화와 전망”, 정치외교학 학술논문.
- 서동윤(2008), “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 : 중국 위협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제관계 및 안보 석사학위논문.
- 이 단(2003),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윙희(2007), “중국의 위협에 따른 군사대응 및 교리발전 방안”,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 아태전략연구회(2005), “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 정복현(2010),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용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석현(2011),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재호(2011), “중국 국방백서 2010 분석과 평가”, 세종연구소 학술논문.
- _____.이창형(2007), “후진타오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 현대”, 한국국방연구원.
- 황정호(2008),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간행물]

이상현 외(2012), “동북아 국가리더십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
보장문제연구소

[기 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지역과, 전투정보과(2003)

복음신문(2012), “군비경쟁 치닫는 동아시아”

신화통신 뉴시스(2010), “중국 7년 새 3배 군비증액 등 군비증강 도미노”

조선일보(2012), “미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대규모 상륙훈련”

조선일보(2012), “[사설] 중국의 영토 野心 지나치면 '反中 연대' 촉진할 것”

중국 군사력 보고서(2006), 미 국방부

MBN뉴스(2012), “[한·중 수교 20년] 경제교류‘비약’”

SBS뉴스(2012), “중·일 잇단 군사훈련 댜오위다오 긴장 고조”

런던국제문제연구소(1999),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2. 국외문헌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1999).

Yi, Xiaoxiong(2005), China's Korea Policy: From 'One Korea' to 'Two Korea',
Asian Affairs, vol. 22, no 2.

Glaser, Bonnie S., and Wang Liang(2008). North Korea: The Beginning of a
China-U.S. Partnership?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1, no 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na's arms buildup in security of Korea

Choi, Sang Won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Depart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discusses studies the threats of China, which is newly emerging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s a G2 nation, analyzes the transition process of China's military power and their arms buildup status, and thereby discusses their effect on the future security of Korea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China held the 18th Party Congress on November 8th, 2012, and officially selected Xi Jinping as the general secretary to succeed the place of Hu Jintao. This point of time when the leader of China—the only country to stand up to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is changed will have great impact on the security of Korea. On November 6th, the same year, the US President, Barack Obama, succeeded in the reelection, and currently, with the Korean President about to be replaced in December, there is

expected to be a lot of changes in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that of Korea.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China obstructed unification by supplying several divisions and brigades including the 4th Field Army, numbering up to 1,000,000 troops to North Korea. Even after the division, China is still supporting North Korea in various ways including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officially and unofficially. In addition to the human wave strategy of the past, China is building up their military strength by applying military strategies armed with high tech military equipment of the modern times. In the military parade held on October 1st, 2009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China's foundation, they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eir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long distance ground-to-ground cruise missile, along with 50 other newest weapons of their Army, Navy, and Air Force. This suggests that China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nd that they are seeking and developing new military strategies due to their arms buildup. This thesis analyzes how China's modernization of military strength has been progressed, the necessity for awareness of China's threats, as well a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ir military buildup. It then suggests in what direction Korea should search for th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thesis examines how China's modernization of military strength has been progressed,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military strength, as well as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s arms buildup—after which, it deducts the effect of China's arms buildup accelerating the arms race of Northeast Asia, and its ensuing effect on Korea's security. The thesis then draws diversified countermeasures against it.

Although China's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and arms buildup are recorded in detail on the "2010 China's Defense White Paper", the

undisclosed military strength and arms buildup will actually be beyond our expectations. China still maintains the Chinese army's traditional ambiguous strategy by creating confusion about the Chinese Army's capacity and actual conditions through their Defense White Paper.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reinforcing their armaments, they are arguing that their defense budget is somewhat low compared to the 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China has announced in the 5th Conference of the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5th, 2012, that their defense budget would be 670,274 million yuans (about 118.9 trillion won), which is an 11.2% increase from 2011. China has emphasized that even though their defense expenditure is increased, it will not threaten the other countries. However,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armament race of the Asia region will be intensified. It is evident that the armament being increased every year as well as the military strength being developed will pose a big threat to Korea's security. Given that, Korea must take economic and military actions that are rational and reasonable to be much help to the national interest. In addition Korea will need to continue to maintain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also build strategic security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Keywords] Awareness of Threats from China, Arms Buildup,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China Defense White Paper